

# 유성업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해야”

## ‘요구 결의안’ 발의... 헌법 제57조 재해석해서 정부가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인정할 것 요구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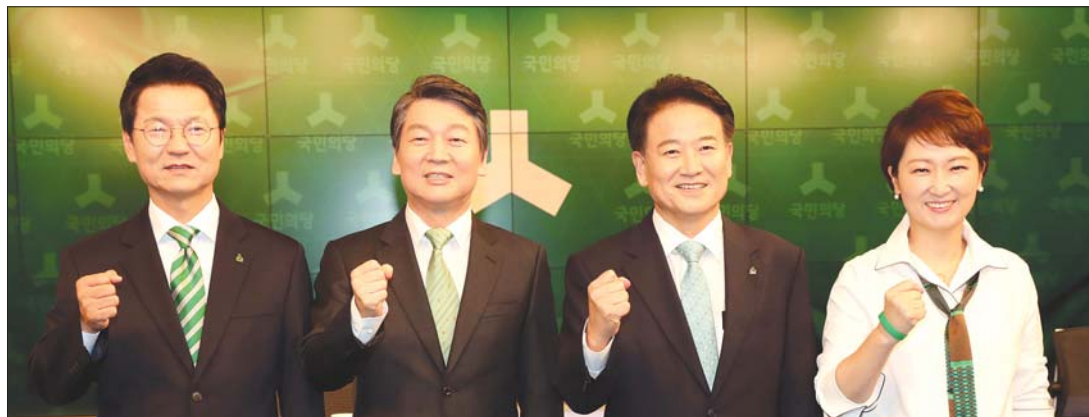
21일, 유성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성업 위원장을 비롯하여 함께 결의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정부가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국회의 예산편성권의 인정을 위해서 헌법 제57조를 재해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문 내용으로는 ▲ 정부의 동기가 필요한 지출 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기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의 동기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도,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은 감액만 가능하나 보니, 정부의 동기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조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되다 보니 예산심의가 부실해지고, 수백 곱할거리는 지적이 반복



“마지막까지 최선을” ‘8·2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24일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 MBN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TV토론회를 준비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안철수, 정동영, 이언주.

되였다.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했던 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예산관계법에 따라 도입된 전용, 사고이월 등과 같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편의적인 수단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신속성이 더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도 국회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할 것

을 주문했다. 결의안 발의에 대표로 나선 유성업 위원장은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사실상 반쪽에 불과했다”며, “국회의 예산조정권이 인정된다면 무너진 국회와 정부의 예산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되살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정은 여·야의 합의를 비롯하여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같이 여·야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이나 법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데 이 결의안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고, 국회에 예산조정권이 주어진다면 부처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유성업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광영,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희,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오세정,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명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진성 기자

### 김춘진 “올뉴 크루즈 · 올란드 구매운동 할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은 23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홍순경 한국GM 군산 대외협력담당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박재만 도당 원내대표, 이재호 도당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잘 팔려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도내 입주 기업 제품 애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최근 침체된 분위기인 군산시를 다시 한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김춘진 위원장은 “내 고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도민들이 적극 애용하고 사랑한다면 지역발전도 더불어 될 것”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올뉴 크루즈와 올란드 구매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순경 한국GM 군산공장 대외협력담당장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좋은 제품으로 전북도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자치대학 제1기생 모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방자치대학 제1기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다. 강의 내용은 교양과 선거법, 선거 출마 예정자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당정치와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정치참여 분석 ▲연설 방법 및 스피치 등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당 홈페이지(www.theminjojob.kr) 또는 전화(063-236-2161)로 문의하면 된다.

도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입지자뿐만 아니라 정치와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興 정발위 첫 상견례... 이재명 성남시장 합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4일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날 발표된 10명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등 5명이 정발위원으로 추가 합류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첫 모임을 한 뒤,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인선 명단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발위는 향후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분과를 나눠 혁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정발위의 이날 추가 인선에는 당내 예비 대선후보 측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직접 정발위원으로 참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에서는 이후삼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강북구 지역위원장이 참여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과 홍정화 인천시의원도 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발위는 전날 최재성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박광온·한정애 의원, 초선의 박경미·이재정 의원을 선임했다. 원외 인사로는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부위원장,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배현미 권리당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포함됐다. /뉴스

## 靑 ‘캐비닛 문건’ 모두 검찰로... 본격 수사 착수

### 박영수 특검팀 2000여건 넘겨 국정농단 수사·재판 급물살 뇌물죄·우병우 ‘스모킹건’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도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모두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죄·블랙리스트 재판과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결론 내지 못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수사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24일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청와대 관련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

검찰이 전날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특검으로부터 1차로 넘겨받은 자료를 합치면 23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수4부에 이 문건들의 분석을 맡긴 상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의 경우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마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이 문건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재직하던 시기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명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공

소유지와 추가 조사에도 활용된다. 청와대가 문화계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 검찰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이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검이 수사를 남긴 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검찰은 조직개편 이후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형사부에서 특수3부로 재배당한 바 있다.

당시 검찰관계자는 “넘겨 받기로한 자료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의 결론을 뒤로 미뤘었다. 결국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다수 문건을 검토한 뒤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게 유력해 보인다. /뉴스

2017.9.22 ~ 9.24 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마당, 사과박시체험, 깃질놀이, 토마토속 "함금반지"를 찾아라!, 전국 한우 콘포타지 대회, 사과와 뽕, 애들포차 체험